

문화산책

박기복

영화감독



충장로는 근대 유산이다. 유산의 가치는 오랜 시간과 생활의 축적, 훼손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 때 빛난다. 충장로 거리와 건물은 화려하지 않지만 강력한 흡인력을 지닌 이유는 일제강점기, 산업화 초입, 민주화 현장, 상권의 흥망성쇠의 스토리텔링이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충장로와 비슷하게 한때 번성했던 대표적인 근대 도심 거리로 군산, 목포, 인천, 대구, 포항, 나주 영산포를 들 수 있을 정도로 희소성과 관광 매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충장로는 시대변천과 광주 시민의 삶과 희망의 흔적들이 거리와 건물 공간 곳곳에 쌓여 있다. 새로 만든 거리나 인위적인 콘텐츠로 절대 흉내 낼 수 없다. 건물은 유물이 되고, 거리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의 동선이 되며, 공실과 빈집에 전시된 근현대 생활 소품은 전시가 된다. 그러한 까닭에 충장로는 그 자체로 이미 완성된 박물관이다. 무궁무진한 문화예술관광 로드 존으로 가능성을 지녔다. 광주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콘텐츠나 도시 재생으로 이벤트 축제를 펼치고 덧씌우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시간과 기억을 읽어내고 드러내는 일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충장로는 행정 정책 사업으로 ‘충장로 상권 르

‘오렌지 로드 근현대 생활역사 박물관’ 조성

네상스’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상권 경쟁력 강화 사업’ ‘도시 재생 연계 상권 활성화 사업’을 비롯해 문화 이벤트 사업으로 ‘충장 축제 연계 상권 활성화’ ‘충장로 문화관광형 거리 조성’ ‘청년문화·예술 상권 프로젝트’ ‘야간관광 특화 거리 조성’ ‘문화가 있는 충장로’ 등 생존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고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관광객은 이벤트 축제가 열릴 때나 반짝 찾아들 뿐 축제가 끝나면 적막이 감돈다. 프로젝트 명칭과 이벤트 축제의 이름은 계속 바뀌면서도 광주는 ‘왜 관광객 발길이 멈췄는가’에 대한 구조적 해답 또한 반복되고 있다. 사람을 불러모으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제 발로 찾아오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였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를 깊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다.

필자는 충장로와 재개발 직전의 빈집 동네에 ‘오렌지 로드 근현대 생활역사 박물관’ 조성을 제안한다. 충장로를 살리는 것은 새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쌓인 시간이다. 한마디로 기억과 추억을 파는 문화예술관광 거리를 꾸미자는 말이다. 버려지는 낡은 집과 생활 물건이 돈이 되고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블루오션의 유망한 사업이라 믿는다.

옛날 살림살이, 부엌, 농기구, 병원, 학교 교실, 미용실, 목욕탕, 롤러스케이팅장, 오락실, 방앗간, 자동차, 의복, 생활용품, 다방, 재봉틀, 레코드, 카메라, 교복, 연탄, 영화소품 및 의상, 서점, 게임방, 사진관, 극장, 빵집, 술집, 음식점, 문방구, 미술관 등 근현대 생활 소품으로 채워질 공실과 빈집은 최대한 원물 그대로를 유지한다면 대한민국 최대 흥미롭고 독특한 생활역사 박물관이 될 것이다.

공실과 빈집을 채워 생활 민속 소품은 필자의 영화 스

테프가 70만 점 이상을 소장하고 있어 얼마든지 채우고도 남는다. 이러한 구상은 도시 재생, 환경, 관광, 문화, 상권을 동시에 묶는, 지금까지 충장로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원물 보존형 생활역사 박물관이다. 충장로 맥락에 아주 정확히 맞는 대안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리모델링 없이도 버려질 생활 민속 원물을 손때 묻은 채 그대로 보존, 전시, 순환시키는 저자본, ESG, 탄소 중립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프로젝트다. 버리지 않는 것이 환경이고 추억과 기억을 지키는 일은 경제가 되는 사업이다. 건물과 거리 자체가 전시물이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설사 실패를 해도 철거와 원상 복구 부담이 거의 없다.

성공한다면, 주변에 속박, 카페, 식당, 쇼핑이 늘어나면서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된다. 많은 민간 투자가 몰릴 것이고 광주 원도심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동시에 광주의 정체성인 민주주의 역사, 인물, 예술, 청년, 문화 이벤트와 결합하면 상권 활성화와 관광 자원화를 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감행할 단체장의 문화예술관광에 대한 인식이다.

‘오렌지 로드 근현대 생활역사 박물관’은 단체장의 임기 이후에도 남는 사업이다. 문화 비전 없는 단체장은 광주의 미래를 남기지 못한다. 문화예술은 장식이 아니라 기반시설이다. 광주의 정신적 인프라다. 문화예술관광은 광주 시민의 기억과 자부심과 정주 의지를 만든다.

광주 시민이 등장 할 일은 이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문화예술관광 행정을 아는 행정 전문가 단체장을 선택하는 일이다.

기고

송승중

광주 북구 민생경제연구소 이사장



2026년 병오년, ‘적토마’의 기운을 담은 새해가 밝았다. 오황에서 ‘병(丙)’은 밝은 불을 의미하며 태양과 빛, 열정, 그리고 투명성을 상징한다. 이는 곧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운으로 이어진다. ‘오(午)’는 십이지신 중 말(馬)을 뜻하며 역동적인 활동성과 속도, 전진, 그리고 자유의 상징이다. 이 두 글자가 만난 병오년은 화(火)의 기운이 증폭된 해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작과 도전의 에너지가 충만한 시기이다. 따라서 올해는 개인과 조직 모두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 다만, 기운이 강한 만큼 성급함이나 과열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마디로 2026년은 ‘열정으로 문을 열고 행동으로 완성하는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을 평가받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중차대한 해이다. 이번 선거는 17개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226개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이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이는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행정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책임 있는 균형발전을 도모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일까.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지는 조기 선거의 연장선상에서 국민 통합과 정치 질서 회복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현 상황을 타개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의 등장을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

또 이는 과거 국기 문란 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를 통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는 길은 자명하다.

바로 ‘실력 있고 참신한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다. 정치를 단순히 개인의 생계 수단으로 여기거나 선거 때마다 기득권에 안주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쫓아 당적을 옮기고 과거 권위주의 세력에 편승했던 인물들은 이번 공천에서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오직 이러한 인적 쇄신만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공직은 개인의 삶을 운목하게 하거나 사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 오로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화합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진정성을 가진 후보가 나서야 한다. 우리 지역민들은 깨어 있는 눈으로 누가 진정으로 지역을 위해 일할 책임자인지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독자투고

학교폭력 없는 ‘행복 학교’ 기대

최근 학교폭력은 단순히 건수의 증가를 넘어, 가해·피해 영역이 넓어지는 ‘저연령화’, 사이버 공간을 악용한 ‘지능화·홍포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또 사소한 갈등도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려는 ‘사법 의존 심화’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5%로 2024년 1차 대비 증가(0.4%)했고,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9.0%), ‘집단 따돌림’(16.4%), ‘신체 폭력’(14.6%), ‘사이버폭력’(7.8%) 순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이다. 1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경미한 사고와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존재한다는 ‘하인리히 법칙(1:29:300)’처럼, 평소 아이들이 보내는 언어적·행동적 신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녀의 학교폭력에 대해 어려움이 있을 땐, 혼자 고민하기보다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및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해 보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자녀들을 향한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우리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 학교’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최관중 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장

사설

‘광주돌봄’ 누구나 누리는 보편돌봄 진화

민선 8기 광주시의 대표 공공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완성형이 돼 가고 있다. 이 제도는 한마디로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로 보고,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당당한 권리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기존 복지제도가 가진 신형주의와 선별주의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모델로 한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오는 3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다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잇따르며 대한민국 돌봄 정책의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2023년 4월 전국 최초로 ‘개인돌봄’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2024년 ‘관계 돌봄’, 지난해 ‘의료돌봄’으로까지 확대된 데 이어 올해는 모든 시민이 권리로 누리는 보편적 돌봄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즉, 그동안에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가구에 한해 비용이 지원됐다면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비용 지원 대상이 전체 시민의 53.7%에서 77.6%로 크게 늘었다는 얘기다.

광주시가 소득·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한 ‘광주돌봄’을 시민의 돌봄 진입장구로 삼아 보건복지부 예산·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운영키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최대 수준의 국비 13억4000만원을 포함해 총 90억원 규모의 사업비도 확보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강점은 한 번의 신청으로 13종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사·식사·병원 동행 등 생활돌봄을 비롯해 대청소·방역·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주거안전돌봄, 의사·간호사·치과 위생사·물리치료사가 직접 방문하는 의료돌봄까지 일상과 건강을 함께 살피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특히 약물 부작용 예방과 의료비 절감을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중독 처방과 과다 복용을 점검하는 ‘다제약물 관리 서비스’를 새로 도입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제로 집중관리군을 선별하는 등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돌봄체계도 정비했다고 한다.

전 생애 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전남 지역상품권 민생경제 회복 이끈다

전남도가 연초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풀기로 했다고 한다. 전남도비 50억원을 투입해 25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선제 발행키로 한 것이다. 전남 지역 사랑상품권은 도내 22개 시·군이 각각 발행하는 지역 전용 화폐다. 지역 자금의 외부유출을 막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마련돼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편의점 등 각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할인율이 적용되고 연말정산 소득 공제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민생경제 소비 촉진과 지역상권 안정을 위한 조치로 정부 예산과 시군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던 기존 10% 할인율에 전남도비로 2%를 추가해 주는 방식이다.

즉, 가게 부담이 집중되는 연초에 한시적으로 할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 올려 소비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 영암군과 무안군 등 전남도내 일부 시군은 자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할인율을 최대 15%까지 운영키로 했다.

사실 전남도는 지난해에도 연초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선제 발행해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1월부터 3500억원을 발행, 전통시장과 지역 내 상가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했는데 두 달도 채 안 된 지난 2월 20일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판매량이 2222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 2024년 같은 기간 1743억원보다 1.3배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확대됐다는 얘기다.

여기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에게도 10%이상의 할인율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전년보다 3000억원 이상 증가한 총 1조3000억원 규모를 발행, 지역경제 회복과 가계경제 지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남 민생경제 회복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전남도는 이번 선제 발행이 연초에 집중되는 가게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앞으로도 도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침체한 골목상권에 은기를 불어넣어주기를 바란다.

취재수첩

행정통합, 충분한 시민 설명 필요

이 산 하

정처부 차장



광주·전남지역 핫 이슈는 ‘행정통합’이다. 지난해 말 언급된 행정통합은 일주일 만에 추진기획단까지 구성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과거 행정통합은 세 차례나 논의됐었지만 각 시·도의 반대, 중앙정부의 지원 미비 등으로 무산됐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 정부는 물론 양 시·도의 의지가 하나로 이어진 모양새다. 이번 행정통합의 핵심은 통합 광역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이 통합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로, 기초자치단체는 현행 시·군·구 체제를 유지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통합의 속도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시·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않은 채 자칫 감싸며 통합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 일부 시민들은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이들이 있다. 물론 지역 사정에 관심이 없거나 통합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이 바뀌는 걸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다. 이와 관련된 의견은 6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나왔다. 행정통합 시 기대효과, 시민 공감대 형성 등에 대한 질문이었다. 급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추진되는 속도감에 자칫 물리적 통합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간담회 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옛말에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이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과거와 달리 가시적으로 다가온 만큼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시·도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행정통합을 이루길 기대해본다.



www.GwangNam.co.kr

최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table><tr><td>정 처 부</td><td>370-7040</td><td>는 설 실</td><td>370-7200</td></tr><tr><td>경 제 부</td><td>370-7020</td><td>임 원 실</td><td>370-7000</td></tr><tr><td>신 업 부</td><td>370-7010</td><td>총 무 국</td><td>370-7093</td></tr><tr><td>사 회 부</td><td>370-7030</td><td>사 업 국</td><td>370-7090</td></tr><tr><td>문화체육부</td><td>370-7234</td><td>광 고 국</td><td>370-7070</td></tr><tr><td>편 집 부</td><td>370-7082</td><td>독자관리국</td><td>370-7080</td></tr><tr><td>사 진 부</td><td>370-7050</td><td>서울지사</td><td>☎978-7090</td></tr></table>							정 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신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정 처 부	370-7040	는 설 실	370-7200																																	
경 제 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신 업 부	370-7010	총 무 국	370-7093																																	
사 회 부	370-7030	사 업 국	370-7090																																	
문화체육부	370-7234	광 고 국	370-7070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